

인권도시 한 걸음 더!

시간	구분	내용	비고
10:00 ~10:30	인사말 개회 기념촬영	축하공연 05(영오)	30분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0:30 ~12:10	세션1 <지방정부와 인권>	<좌장>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인권의 지역화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한상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은평구인권영향평가 - 서정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100분
		열린토론	
12:10		점심시간	70분
13:20 ~16:40	세션2 <지방의회와 인권>	<좌장> 박경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인권도시 전환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과제 - 손민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부평구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도전 - 유경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 윤재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00분
		열린토론	
16:40		Tea Time	20분
15:20 ~17:00	세션3 <시민사회와 인권>	<좌장>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 이념을 넘어 권리로 -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 조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100분
		열린토론	

목 차

• 인사말	5
• 공연소개	13
• 세션1 〈지방정부와 인권〉	21
-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23
- 인권의 지역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39
- 은평구 인권영향평가	61
• 세션2 〈지방정부와 의회〉	93
- 인권도시로 전환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과제	95
- 부평구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도전	107
-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113
• 세션3 〈시민사회와 인권〉	119
-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121
- 사회복지, 이념을 넘어 권리로	127
- 인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139



인사말



인 사 말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019년 제1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1. 우리는 인권향유자이자 인권옹호자다.
1. 우리는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한다.
1. 우리는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 및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개발하고, 이에 협력하고 함께 한다.
1. 우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2020년 제2회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위 약속을 지켜왔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제2회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17개 광역지자체중 가장 늦게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권위원회 출범도 가장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시간동안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연대하며 최선을 다해온 결과, 만연해있던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왔고, 최근 위와 같은 열정과 노력, 그리고 성과 등을 인정받아 인천시는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차기 의장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인권현장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불평등과 위험은 더욱더 증폭되고 편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위험과 감염의 위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만을 강조하다보면, 일시적인 안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권사각지대는 더욱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더욱 증폭, 가속화시킨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 연대를 해야 합니다.

제1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의 부제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의 부제는 ‘인권도시 인천, 한걸음 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인권도시 인천을 향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72주년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인권옹호자들은 그러한 선언적 노력을 현실에서 실천으로 구현하고 있는 선구자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했던 1998년, 유엔이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을 통해 인권옹호자의 개념과 권리를 규정한 것은, 누구든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가지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인권의 옹호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권 옹호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추홀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분명 바이러스는 희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에 노출되고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분들 또한 여러분이십니다. 행정의 빈틈에 대해 우려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향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먼저, 올해로 72회를 맞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인천에서 열리는 인권옹호컨퍼런스 개최를 30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엄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인권활동가를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각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더욱더 가뭇야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9년 1월 ‘인천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시작으로 노동 청소년, 고령의 경비원, 체육인,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의 기초는 시민의 존엄한 인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함

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도 부터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챙겨나갈 것입니다. 시민 한 분 한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며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미추홀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2020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는 차별과 혐오, 자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인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인권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이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535교 1,107학급 25,035명에게 지원하였고, 학교구성원 인권상담을 통하여 213건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골목골목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미추홀구 구청장 김정식입니다.

올해로 72회를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인천이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권컨퍼런스를 미추홀구도 함께하게 되어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2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이 2020년 오늘 이곳 인천에서도 유효한 이유는 인권은 완성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 중인 인류의 과제이자 끝없는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의 존엄을 인권의 이름으로 지켜야했던 과거보다 어찌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이유로 지켜져야 할 인권이 존재합니다.

미추홀구는 인천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의 대열에 함께 하고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골목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사회적약자를 돌아보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우리가 지향해야할 인권도시의 이름은 어찌면 세련된 브랜드나 거창한 구호가 아닌 조금 더 힘든 이웃과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공존과 평화의 ‘손내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어 개최하는 오늘의 인권컨퍼런스는 당연히 인천이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공무원, 더 많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이름으로 모이고 인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인권도시 인천”임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미추홀구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공연



공연팀 프로필

05는 장애인 인권 활동 현장에서 함께 노래로 목소리를 전하하는 노래패입니다.

양준호(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솔(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언(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준서(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강사 겸 배우)

추주식(장애인예술교육강사 겸 배우)

노래1 내일로(가사 개사)-뮤지컬 레미제라블

노래2 그날을 기약하며(가사 개사)- 뮤지컬 영웅

노래소개

'내일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유명한 메인 곡입니다. 프랑스 바리케이트 혁명을 다루고 있는 노래 가사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 개사를 하였습니다. '그날을 기약하며'도 마찬가지로 뮤지컬 영웅의 곡으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래를 또한 저희에 맞게 가사를 개사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해 알아가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1 <내일로>

내일은 또 다른 날 또 다른 운명이 이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밭
날 막아서는 장벽들은 부셔지지 않는다. 내일로

두려움 가득한 세상, 이 땅에 어찌 살아 갈까?
내일로

투명 유리병 속 깊이 벗어날 힘 하나 없는데

하루 가도 나홀로
이겨 낼 수 있을까?

하루 가도 꿈은 멀리
우리 함께 한다면

그대 힘이 되어줘
우리 함께 한다면

두손 잡고 나가자--

폭풍 와도 내일은
두손 잡고 나가자

차별없는 자유 온다.
동지들이 따를까

전열 갖추 나갈때
가느냐 머무르냐

나와 함께 싸우자!

때가 됐다! 그날 왔다!
내일로!

내일되면 자유의 날 자유 찾아 나가자
형제 자매 동지들아 함께 힘껏 나가자

정신을 깨워 다들 나가자
여기 멈춘다면 그건 벼랑 끝! 억압을 깨고 차별 부수고
방구석에 박혀 있을 순 없어!

내일이면 시작 되리! 깃발 높이 올려라!
민중들이 깨어나! 민중들이 깨어나!
새로운 세상 열리는 날! 새로운 세상 열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여기 남아 함께 싸우자!

내일로

두려움 가득한 세상, 이 땅에 어찌 살아 갈까?

내일로

<01>정신을 깨워 다들 나가자 여기 멈춘다면 그건 벼랑 끝---
<02>투명 유리병 속 깊이 벗어날 힘 하나 없는데

내일은 멀리 떠나리, 내일은 정의 세울 날

내일이 오면 신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내일엔~내일은~내일로~!

노래2 <그날을 기억하며>

400만 동지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우리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잇을 순 없는 건 빼앗긴 권리, 신음하는 우리의 동지,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동지 위해

시간이 흘러도 역사 속에서 기억할 열사의 정신들을
이 순간 오늘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그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바람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오 기약된 그날을 위해

자,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이 땅에 부는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동지를 위해

그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바람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오 기약된 그날을 위해

자,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이 땅에 부는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동지를 위해

인권도시 한 걸음 더!

SESSION

세션

1

지방정부와 인권

좌장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 인권의 지역화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한상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은평구 인권영향평가

서정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 열린토론



인권도시 한 걸음 더!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

박재성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2020년 인권정책 추진사항

제1차 우리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사항을 통한 인권도시 실현

I 인권정책 개요

☐ 기본계획

○ 수립근거 :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차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 6.)

☐ 시행계획

○ 수립근거 :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항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체계

구 분	내 용	주 체
계획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부서별 시행계획 취합·수립 	인권부서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계획 심의(기본조례 제11조) 	인권위원회
계획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시행계획 수립·집행 	소관부서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익년도 계획반영 	공 통

○ 제7차 인권위원회 시행계획 추진사항 보고·심의(2020.10.23.)

□ 목표 및 과제

○ 비전 및 전략

비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조성
-----------	-----------------------------



가치	참여	포용	존중
-----------	-----------	-----------	-----------



전략목표 (4)	추진과제 (15정책 66과제)	
함께 하는 인권행정	1. 효율적 인권제도 구축·운영 2. 소통·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	(9개 사업)
인권문화 확산	3.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제고	(4개 사업)
취약계층 인권보장	4. 여성 5. 아동·청소년 6. 장애인 7. 노인 8. 이주민 9. 소수자 등	(28개 사업)
생활인권 증진	10. 안전한 도시 11.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12. 노동존중 도시 13.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14.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15.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25개 사업)

○ 추진과제 (66개 과제)

전략	정책과제	추진과제	
		과제명	담당 부서
I. 함께하는 인권행정 (9)	1. 효율적 인권제도 구축 운영	1-1. 인권업무 조직·운영체계 강화	협치인권실
		1-2. 인권센터 설치·운영	협치인권실
		1-3. 인권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협치인권실
		1-4. 인권지표 및 영향평가 도입	협치인권실
		1-5. 인권상담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협치인권실
	2. 소통·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 (협치)	2-1. 인권위원회 운영	협치인권실
		2-2. 인권보호관 구성·운영	협치인권실
		2-3.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증진	협치인권실
II. 인권문화 확산 (4)	3.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제고	2-4. 인권도시 네트워크 활동증진	협치인권실
		3-1. 인권교육 강화	협치인권실
		3-2. 인권행사 개최 및 홍보	협치인권실
		3-3. 공공기관 인권경영 문화 확산	협치인권실
III. 취약계층 인권보장 (28)	4. 여성	3-4. 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과
		4-1.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여성정책과
		4-2.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	여성정책과
		4-3. 단절 없는 경력 이음 환경구축	여성정책과
	5. 아동·청소년	4-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여성정책과
		5-1.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아동청소년과
		5-2. 아동학대 예방·보호	아동복지관
		5-3.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과
		5-4. 청소년 인권 강사 양성 및 교육	아동청소년과
	6. 장애인	5-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노동정책과
		6-1.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개선	장애인복지과
		6-2.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자립도모	장애인복지과
		6-3.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과
		6-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과
		6-5.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장애인복지과
		6-6. 장애인가족의 양육지원 강화	장애인복지과
	7. 노인	6-7. 정신질환자 통합적 지원	건강증진과
		7-1.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정책과
		7-2. 노인 인권보호	노인정책과
		7-3. 어르신 안심 안부 서비스	노인정책과
	8. 이주민	7-4. 인천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과
		8-1.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가족다문화과
		8-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가족다문화과
		8-3.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가족다문화과
		8-4.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가족다문화과
		8-5. 이주민 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노동정책과
9. 소수자 등		8-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9-1. 사회적 소수자 혐오·편견 해소	협치인권실
		9-2. 노숙인 등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복귀 도모	자활증진과

전략	정책과제	추진과제	
		과제명	담당 부서
IV. 생활인권 증진 (25)	10. 안전한 도시	10-1. 자살 예방 환경조성	건강증진과
		10-2.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전정책과
		10-3. 폭염대응사업 강화	자연재난과
		10-4.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 운영	재난상황과
		10-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입	도시경관과
		10-6. 피해주민 지원	사회재난과 현장대응단
	11.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11-1.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택시화물과 버스정책과
		11-2. 도서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도서지원과
		1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확충	장애인복지과
	12. 노동존중 도시	12-1.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동정책과
		12-2.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노동정책과
		12-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노동정책과
	13.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13-1.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13-2. 예방중심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건강관리	건강증진과
		13-3. 아동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건강증진과
		13-4. 사각지대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증진과
		13-5. 미세먼지 저감	대기보전과
		13-6. 생활 유해환경에서 안전한 도시	환경정책과
	14.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14-1.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3無 실현	교육협력담당관
		14-2.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교육협력담당관
		14-3.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문화예술과
		14-4. 저소득 생활체육 지원	체육진흥과
	15.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15-1. 인천 복지기준선 운영	복지정책과
		15-2. 시민참여형 보편복지 실현	복지정책과
		15-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정책과

II

2020년 동향 및 추진사항

1

여 건 및 동 향

☐ 코로나-19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른 인권환경 악화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경제활동과 대면활동 제약으로 시민(특히 취약계층)의 소득과 삶의 질 저하
- 방역강화에 따른 자원과 관심 집중으로 인권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감소와 인권침해 위험 증가
 - 외국인대상 마스크 미판매(3월), 이태원클럽 집단감염관련 프라이버시 침해(5월), 인천 초등생형제 화재사건(9월) 등

☐ 대면활동 제약에 따른 네트워크 활동 약화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권관련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행사의 취소·연기·축소, 비대면화로 긴밀한 소통·협력 부진
 - 공공기관 주관 각종행사 취소·연기, 대면행사 50인 미만으로 개최
- 익숙한 대면방식에서 비대면화에 따른 플랫폼 부족 및 불편 초래
 - 보안상 상용플랫폼 사용곤란, 비대면 플랫폼 접근성 제약

☐ 인권제도 기반강화

- 市 인권조직 개편
 - 노동인권과에서 협치인권담당관실로 시민인권팀 이전 (7월)
 - 인력증원 1명, 인권상담실 개소(10월)
- 분야별 인권조례 제정
 -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례(6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장(10월),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10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10월), 체육인 인권조례(10월) 등
-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 (인권 기본 조례) 서구(2019.11), 부평구(2020. 8), 미추홀구(2016. 7)
 - (청소년노동인권) 서구(2019. 7), 미추홀구(2019. 7), 동구(2020. 5)
 - (직장 내 괴롭힘) 계양구(2020. 9)

□ 한계 및 대응

- 코로나-19의 인권환경 악화, 분야별 인권조례의 확산으로 인권 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조직과 인력은 증가되지 않아 조례제정 취지에 알맞은 적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시민인권팀) 체육인인권조례 등 인권침해구제업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인권구제 전담조직(인력) 부재
- 신규 인권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부서 간 협업증진, 조직효율화 모색
 - 인권업무 관련부서(기초지자체 포함)간 소통·협력 증진
 -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기능 조정 및 효율화
- 코로나-19의 인권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인권토론회 개최, 실태조사 등
- 비대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플랫폼 구축 운영
 - 인권교육, 인권회의, 인권토론 등

2 주 요 추 진 사 항

1 함 께 하 는 인 권 행 정

① 효율적 인권제도 구축·운영

- 시민인권팀 직제개편(7월)
 - 부서이동(노동인권과→협치인권과), 인력증원(1명)
-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실적(10월)

연도	접수	조치결과					권고	진행
		소계	각하	기각	취하	인용		
합계	21	17	9	4	1	3	5	4
2019	3	3	2			1	1	
2020	18	14	7	4	1	2	4	4

- 청내 인권상담실 설치·운영(10.23)
 - 본청 1층 시민소통실 내

② 소통·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

- 인권위원회 활동
 - (개최) 정기회의 3회, 소회의 3회, 광역협의회 3회
 - (계획) 정기회의 2회, 소회의 1회, 광역협의회 1회
- 인권보호관 활동
 - 인권보호관회의 : 정기(격월), 수시(침해사건 논의)
 -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 참가(광주, 10월)
 - 인권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0월)
- 시민사회 소통협력
 - 지역인권단체 네트워크 간담회(11월3일), 인권컨퍼런스(12월)
 - 분야별 인권토론회 : 3회(사회재난, 여성, 이주민분야)
- 인권도시 네트워크 활동
 - 국가인권위 주관 인권옹호자회의, 교육협의회, 워크숍 등 참가
 -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10월)

2 인 권 문 화 확 산

③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제고

- 인권교육 추진

- 인권아카데미 : 3회(10월), 200명 내외
- 인권영화상영 : 6회(11월), 300명 내외
- 공모사업(민주화운동센터 운영)
 - “민주와 인권을 말하다” UCC 공모전
- 성 평등 문화 확산
 - 인천여성영화제 개최(33편), 양성평등 주간행사(9월)
 - 학교 내 성 평등 교육지원(인천 에콜제 프로젝트)

3 **취 약 계 층 인 권 보 장**

4 **여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
 - 인천형 여성친화 마을조성 모델개발 연구용역 : 2~7월
 - 여성친화도시조성 원탁토론 : 10월
- 민관협력 여성안심환경 조성
 -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64개소, 안심지킴이집 989개소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2,598개소)
 - 도서지역 찾아가는 가정·성폭력 이동상담(24개 도서)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2개소), 1개소 추가설치 추진
 - 여성 안심드림 멘토링 위탁사업(푸른희망담쟁이)

5 **아동·청소년**

-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구성(1월), 기본계획 수립(12월)
- 아동학대 예방·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2개소) 운영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홍보물, 지하철 광고 등)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수행(인천가족재단 수행)
- 청소년 인권강사 양성 및 교육
 - 공모사업 추진(인천여성회 부설 평생교육센터)

6 **장애인**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피해장애인 쉼터개소,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립도모
 - 민간기업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7월, 설계공모 및 설계)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17개소), 탈시설정책 민관협의체 구성(3월)
 - 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가족의 양육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돌봄, 휴식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 코로나 우울극복 심리지원, 정신건강 핫라인 운영,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회원 관리 등

7 노인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안전·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이동, 활동지원 등
- 노인인권보호사업
 - 전문기관을 통한 노인문제 상담, 학대노인 쉼터운영 등
- 어르신 안심 안부서비스
 - 사물인터넷 활용, 거동불편 요보호 독거노인 8,600명
- 중증 치매노인 돌봄기법(휴머니튜드) 도입
 - 휴머니튜드 도입 관계자회의, 사업계획 수립(5월), 트레이너 양성 및 치매가족대상 강좌개최 추진(2021년)

8 이주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상반기 21천여명)
- 결혼이민자 학력신장(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지원(바리스타 등 3개)
- 다문화자녀 멘토링·위기가정치료 등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축제(9월)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공모사업 1.3억)
-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조례 발의(의원입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교육·취업·커뮤니티·건강검진 지원, 상담, 지역협의회 운영

9 소수자 등

- 노숙인, 쪽방주민 등 지원사업
 - 노숙인 숙식제공, 취약계층 이동검진, 폭염·동절기 대비 물품지원 등
- 소수자 혐오차별 인식개선(2021년 공모사업 추진)

4 생활 인권 증진

10 안전도시

- 자살예방 환경조성
 - 생애주기 자살예방교육, 자살유족·자살고위험군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 인천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폭염대응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그늘막, 수목쉼터 등)
-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운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입
- 피해주민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화재피해주민 긴급구호

11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415대 : 특장차 145, 바우처택시 270대)
- 저상버스 도입(59대), 도서지역 여객운임 지원, 선사결손 보조
- 장애물 없는 인증건물 확충(30개소 목표)

12 노동 존중 도시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본회의, 분과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노동법률상담소 운영)
- 비정규직 차별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20 콜센터 상담인력)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생활임금제 운영

13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 취약계층 의료지원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강화, 옹진) : 병원선 운영, 보건기관 장비 및 시설지원
- 금연클리닉(2만명), 비만아동 돌봄 놀이터 운영(17개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65세이상), 초등생(5학년) 대상 구강관리
-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
 - 암환자·희귀질환자 지원(비용, 재가관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 미세먼지 저감사업

-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대기오염 감시강화(200개소), 민관협력
-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화학물질 정보 GIS 지도공개

14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3無 지원
 - 무상급식(34만), 무상교복(중·고 신입생 5만), 무상교육(고교 2·3학년)
-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51기관, 129개 프로그램), 장애인인 야학교육(6기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10월)
-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 생활문화 동아리 및 축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확충
- 저소득층 생활체육 지원
 - 5~18세 저소득 청소년 대상 매월 8만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15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 5대 분야(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에 대한 최저·적정 기준설정
 -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개최(5~6월), 6개 분과 192명
 - 인천복지기준선 발표(10.29) : 5대 영역 118개 사업
- 시민참여 보편복지 실현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출범, 사회서비스원 설립(11월)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읍면동 보건복지팀 확충으로 서비스 강화

3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취지 및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1.
- 지원대상 :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 사업 5~20백만원 범위 내(백만원 단위 신청)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지원분야 : 7개 분야
※ 수요조사후 지원분야 확대·추가 예정
- 선정방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원방향

- 시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
- 공익증진 차원에서 시 정책에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 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2020년도 사업 유형(예시)

- ① 협치소통 분야 : 협치, 시민소통, 시민참여 등 市에서 권장하는 사업
- ② 남북교류 분야 : 남북교류협력 모색 시민아카데미, 교육·캠페인 등
- ③ 생활환경녹지 분야 :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구현 관련 환경정화활동 등
- ④ 일자리경제도심재생 분야 : 소상공인 활성화, 원도심 지역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 ⑤ 해양항공교통안전 분야 : 168개 아름다운 인천섬 알리기 사업, 교통안전문화, 기초질서 지키기 등
- ⑥ 보건복지가족 분야 : 따뜻한 공동체 인천 실현을 위한 사업 등
- ⑦ 문화관광체육 분야 : 문화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향후계획**

- 사업공고 : 2021년 1월중 (시 홈페이지, 시보, 일간신문)
- 사업선정 : 2021년 3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사업평가 : (중간평가) '21년 7~8월 / (종합평가) '21년 12월



인권의 지역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한 상 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의 지역화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2020. 12. 10.

한 상 희
(건국대 법전문원)

이 글의 내용은 발제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2016.8.)의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이므로 인용할 때에는 발제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지역화, 지역의 인권화

- 인권의 지역화
 - 민주화 – 인권의제의 일상화, 인권의식의 고양
 - 분권화 – 주민의 주체화(참여, 자치)
 - 세계화 – 지역 중심의 생활세계 구성
 - 세계시민권(global citizenship) : 국가단위 시민권의 대안
 - 영역적 경계가 없는 범지구적 단위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도시단위가 인권실현을 위하여 더 낫다고 주장
- 지역의 인권화
 - 생활정치 – 생활공간이 인권의제로 등장
 - 도시권 – 인권의 새로운 개념화
- 인권도시의 선언

도시권

- H. 르페브르,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 도시 거주자 누구나,
 -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를 가짐
 - 작품으로서의 도시
- J. 홀스틴의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 개념
 -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국가보다는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도시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 생활정치

- 생활정치
 -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온라인 기반의 유연자발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을 만들어내고
 - 이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
 - 시민적 자아의 실현, 공존·공생의 가치를 추구(조대엽).
- 촛불시위
 - 시민들의 참여의식에 터를 잡은 생활정치(김호기)의 전형적인 사례
 - 도시공간에서의 참여와 공감, 의사소통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제시

지방자치- 생활정치

- 다양한 정체성,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
 - 자발적으로 공공적 이익을 함께 만들어 내는 정치행위를 통해
 - 종래 정치의 영역 바깥에 자리 잡았던 생활영역들-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들을 하나의 생활체계를 구성
- 삶의 불안정성과 피폐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공감'능력을 회복하고 "생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김현미) 정치적 행위가 곧 생활정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6.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일상적 수요에 가까이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 근거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특히 교육, 주거, 보건, 환경 및 치안과 관계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결정은 인권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주민들이 인권을 누릴 가능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이민자나 소수민족 등 지역 공동체에서 외부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침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권의 관점을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7. 지방정부의 인권 업무는, 존중 의무, 보호 의무, 이행 의무라는 전형적인 국가의 세 가지 인권 의무를 따른다.

29.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소수민족, 토착민, 성차별 피해자,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 지방정부가 당면한 다섯 번째 문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불인정이다. 이는 보통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나타난다.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가 소외된 공동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지역단위 인권보장체제

-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성찰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공공성을 구현함에 있어 국가단위 인권보장체제보다 유리
 - 국적이 없는 이주자들도 도시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에 더 민감할 수 있다.
- 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들 - 그 각각 고립된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체계를 구성하는 상호 결합된 요소/환경들
 - 시민들은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자신의 생활 속으로 재구성하여 포섭
- 이 점에서 이러한 사회권적 권리들을 분배적 복지가 아닌 성찰적 복지, 혹은 시민이 스스로 구성하는 자아실현적 복지로 치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됨
-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 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해결을 필요로 하며, 이런 문제들은 국가단위보다는 마을공동체나 도시단위가 더 적합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장점

- 2013년 9월 제24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속가능성, 접근성, 실효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지방정부만의 장점을 가짐
 - 중앙정부차원의 인권정책실행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지방정부가 메우는 장점
 - 특히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로부터 인권보장, 보호, 증진의 역할을 하는 견제기능 수행
 - 주민생활과 밀착한 인권의제의 발견과 즉각적 조치 가능.
 - 지자체의 주 업무가 주민의 복리와 직접적 관련을 가지기 때문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한계

- 인권의제의 보편성 :
 - 중앙 및 지방에서 차별화 및 개별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구·권한의 중첩성
 - 중앙의 국가인권위원회 - 각 광역시 인권기구 - 기초단체 인권기구
 - 옥상옥의 계층구조: 지방정부의 인권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속한 하위기구 혹은 면피성 기구로 작동할 가능성
 - 인권 지향성 부족
 - 인권보호를 방역·검역 행정/경제정책과정의 부분/하위개념으로 전락
 - 특히 방역법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응에 인권적 고려 부재
- ➔ '행정 안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 안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해야

인권도시: 실천적 논의

- 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 유네스코-유엔 해비타트: 국가차원의 인권주제를 도시차원에서 조명
 - ① 지역 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 ② 도시에서 배제되고 소외받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③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자유 ④ 값싸고 쾌적한 도시서비스에 대한 권리
-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현장 추진
 - 브라질의 시민단체 중심,
 - 도시에 대한 권리 보장 위한 세계적 차원의 운동
- PDHRE(인권교육민중운동)의 인권도시 운동
 - 인권도시선정(시민참여보장 및 취약집단 인권 보호)
 -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등 30여 개의 도시들이 참여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 권리의 주체:
 - 시민 → 도시거주자 → 도시이용자로 주체확장
- 권리의 내용:
 - 도시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권,
 - 그 결과로서의 자유권 및 사회권, 공유/전유의 권리
- 도시행정에서 시민참여보장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 취약 집단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개발도상국 인권 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 생존권, 주거권, 도시의 민주적 관리
- 선진국 인권 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 이주민 보호,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철폐, 환경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

- 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1998)
- 유럽의 400개 이상 도시들이 이를 비준
-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집합적 공간이다.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생태적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연대의 의무가 있다.”
 - “도시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 거주자 모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 도시에 대한 권리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1. 시장의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 및 정치 공간에 도움이 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2.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시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공공 소유의 권리
3.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현재 선진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에 대한 권리. 이 토지는 현 행정구역 경계나 도시적 혹은 농촌적 토지이용 실태와는 무관한 역사적·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5.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동네, 작업장, 치료와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장과 폐기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곳을 배상받을 권리
6. 안전한 동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격대상이 되었던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경찰, 이민당국, 민간조직 등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미국 도시에 대한 권리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7. 인종, 종족,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주, 이민당국, 고용주가 추방하겠다는 협박 없이 주택, 고용,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
8.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들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교통, 하부구조, 서비스를 누릴 권리
9.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의 계획과 거버넌스에 관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 속에서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공공 정보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포함됨
10.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 곳의 지역 경제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모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제도들로부터 경제적 호혜성을 확보하고 부흥할 수 있는 권리
11. 국가의 개입 없이 국경 너머 도시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
12. 환경 파괴 및 도시로 이주를 강요하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누릴 농촌 주민들의 권리

인권도시: 사례비교

-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해의 도시에서 인권도시로)
 - 반차별정책 및 평등정책으로
- 독일 뉘른베르크: (가해의 도시에서 인권도시로)
 - 유대인 학살의 근거가 된 인종차별법
- 캐나다 몬트리올: (인권 규범화 및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
 - 연방, 주 및 시 헌법에 도시의 인권헌장 의무화
- 미국 워싱턴 D.C.: (만연한 차별에서 반차별적극조치의 규범화, 제도화)
 - 인권법, 인권국, 인권위원회
-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과거청산/ 헌법개정 및 관련부서 설치, 운영)
 - 대규모 실종에 대한 책임자 조사 및 처벌 /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설치 / 기념관 설립 / 기관 연계를 통한 인권교육
- 오스트리아 그라츠: (과거사 청산 및 지역 특성)
 - 종교갈등 및 반유대 거점도시에서 관용적인 도시문화와 정책발전 / 대학도시 장점 살려 협치의 구조 형성

인권도시: 시사점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경우:
 - 새로운 인권규범 및 제도화의 정착
- 과거청산 및 미래지향적 인권도시:
 - 과거사 청산-인권규범 및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
- 정치행정체제: 대부분 연방정부형태 및 지방분권화가 잘 정착되어 있음
- 이해당사자, 참여주체 저변 확대:
 - 국가의 책무에서 지방의 책무 / 시민의 행정 참여
 - 기업 또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인식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인권도시는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음
-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
 -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란, 도시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엄성을 인정받음을 의미 →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일컫는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사회단체들의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모두 포함
- 시민참여의 범위
 - 인권, 행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권행정의 직책을 담당하는 직접참여의 방식도 필요

인권도시: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

- 인권제도 구성: 시민 주도 및 시민 참여 증대
 - 인권도시의 주체로서 시민의식 함양
 - 모든 시민이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지향
 - 인권제도 운영: 시민 연대 및 협동 구현
 - 사후구제 혹은 행정민원해결의 수준 → 인권제도 및 인권체제의 역량 강화
 - 시민과 시민, 다른 지역, 외국의 지방정부 등과의 연대와 협동
 - 전 행정 영역: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 독립성의 보장
 - 인권중심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인권제도의 작동
 - 목적의식의 실현을 위하여 최적화된 인권제도의 구성
- ➔ '참여'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시민참여형 정책'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의 인권침해와 인권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인권도시의 주체'로서 역량을 확장해가는 인권정책이 요구됨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의 경우

- 인권행정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상시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이 필요
- 과정
 - 영역별, 의제별 인권단체 및 활동가 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 신뢰관계 구축 및 인권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모임을 만들어서 정책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확인 및 상호역할 논의, 정책협의회 구성방식 및 운영원리 도출을 목표로,
 -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과제와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 현실적으로 인권단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공식화되지 못한 이후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인권레짐: 제도의 구성

- 인권제도의 주요 요소
 - 인권전담행정부서,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옴부즈퍼슨, 옴부즈만, 옹호관 등), 인권센터 연대조직 등
- 인권제도의 형식 유형
 - 국가별, 지방정부별 다양한 인권제도 형태 : 정형화 불가능 → 적정모델 모색 필요
- 지방정부의 한계
 - 지방자치제의 미비: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중심 행정수행 전면화에 한계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 문제
- 실현의 가능성
 - 적절한 인권제도의 모델 설정 및 '유연한 접근방법' 모색

지역인권레짐: 제도의 구성 – 주의점 1

- '인권기반행정'과 '인권행정업무'의 구분 명확히...
 - 독립적 '인권행정업무'는 존재하여서는 아니됨
 - '인권기반행정'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인권행정업무'가 시행되어야
 - '인권기반행정'은 지방정부 각 부서의 모든 행정행위가 인권에 기반하여, 인권을 보장,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
- 인권기구의 목적과 위상 명확화
 - 자문기구인지, 관리감독기구인지, 집행기구인지, 의사결정기구인지...

지역인권레짐: 제도의 구성 – 주의점 2

• 인권기구의 권한보장과 위상존중

- 효과성·효율성:
 - 제도적 절차에 한정된 문제해결방식이 아닌, 인권의 보호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비제도적 및 비공식적 갈등해결의 방식을 도모해야
- 민주성:
 - 의제의 설정, 정책의 구상, 제도의 형성, 대안의 실행, 평가와 반성 등 인권기반행정의 제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거버넌스 작동의 민주성을 보장
- 책임성:
 - 행정기관의 책임과 인권기구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구분 및 유연하면서 효과적인 상호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인권기구의 기능

- 독립성의 확보
 - 인권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서 인적 및 물적 독립성 확보 중요
- 인권 우선 행정
 - 행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전제
- 사례 해결의 원칙
 - 인권친화성 및 독립성 증진, 회복적 정의 관점의 피해자 접근
- 공무원 인권교육의 강화
 - 인권친화성을 강화하면서도 실무 요소가 가미된 공무원 인권교육
- 시민 주체적 인권제도 운영
 - 인권제도의 연대성을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와 결합

인권제도 설계의 요소

- 인권제도의 숙의성, 독립성, 전문성 및 시민사회의 참여
 - 숙의제도로써 인권행정 작동을 위한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친화성 및 독립성 증진
- 인권중심성 증진을 위한 인권담당부서의 권한 강화
- 인권중심성 강화를 위한 인권제도에 의한 행정참여제도 보장
- 인권교육제도의 독립성과 연대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확보 및 강화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구성방안 1: 시민주도체계

- 인권위 구성 및 운영에서 시민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 추구
- 특히 인권위 구성 과정에서의 시민의사 적극반영
 - 자치단체장에 의한 위촉:
 - 인권위원회의 구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 정작 인권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이 배제됨
- 인권위 운영에서의 민관 인권네트워크 활용 필요
- 주민참여기반의 조성
 - 지방정부 행정의 기획, 입안, 시행, 점검, 평가 등 전 업무영역에 걸친 주민참여 기반 조성
 - 이를 통해 특히 인권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비판,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게끔
- 주민참여방식의 인권영향평가제도(참조: 시민참여예산심의제)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2: 대외연대체계

- 대외협력체계 구축
 - 인권보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민주성,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위한 방안
 - 인권보장의 연대성의 강화와 자료·자원 등 협력체계의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와 연대관계
 - 분업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인권 행정 구현
- 광역과 기초단체 인권제도와 연대체계
 - '풀뿌리 인권행정'
 - 광역정부의 지원과 기초정부의 집행
 - 기초정부에 대한 광역정부의 행정지도방식은 금기:
 - 기초정부의 독립성 보장 필요
- 타 지방정부와의 연대
 - 협력과 연대, 정보공유 및 자원 지원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3: 국제적 연대체계

- 목표: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증진
- 특히 아시아 차원에서 지역인권체계의 모델 제공, 상호협력
 - 인권 전반에 걸친 의제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의제 선정
 - 협력관계 구축 정도에 따라 이를 점진적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국제적 연대체계의 조직
 - 인권도시포럼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체계 조직: 협력도시 개념으로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을 향한 노력(?)

인권기구 구성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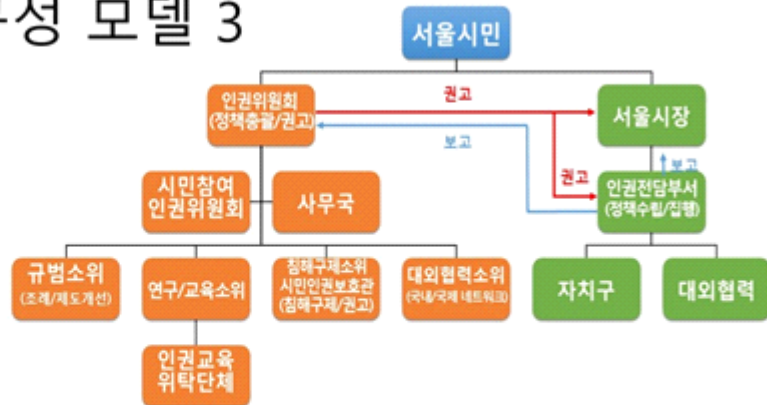
- 독립형: 시민인권보호관 및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교육, 정책 등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한 인권재단 설립
-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법제도 및 관행개선 필요

인권기구 구성 모델 2



- 분리, 견제형
- 각 구성단위의 독자성 유지: 이행기적 모델
- 지방분권 강화 시 각 구성단위의 독립성과 특수성 발현
-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에 곤란한 약점

인권기구 구성 모델 3



-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구성요소들의 전문성 보장
- 인권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안정성 확보에 장점

인권위원회 강화 방안

- 인권위원 중 적정 인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특히 광역의 경우)
- 인권위 업무지원 및 상임위원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 법제정비: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및 타부서와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위원회는 행정 전반에 걸친 심의권, 감시·모니터링의 권한, 정책권 고권 가져야..
- 인권전담부서 시정 총괄 기획 부서에 배속 - 기획·조정권 부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교육전담기구 설치

- 인권정책연구 및 개발, 인권교육 등 전담기구 설치
 - 인권센터 혹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연구와 교육의 기구
- 기능
 - 인권정책 연구 및 개발
 - 인권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개발, 시행
 - 인권교육과정·교재·방법 등 개발/인권교육강사 양성
 - 현장형 인권교육의 운영 혹은 주관
 - 인권정책개발 및 교육에 관한 다른 지역과의 협력
- 시민·인권단체, 타 기관 등과의 인적 교류를 비롯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실시
 - 특히 인권활동가들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 공무원의 참여기회도 보장

인권업무조정협의회 구성

- 인권업무조정협의회의 설치
 - 행정 정책과 기획의 수립, 집행과 처분, 이와 관련한 사전조치와 사후조치의 과정에서 인권행정의 전제가 효과적으로 개입되고 실효성 있게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구
- 구성의 예
 - 시장 또는 부시장 + 인권위원회 위원 약간명 + 시민인권보호관 + 각 실·부·국의 장 또는 책임자 + 인권위원회 위원 약간명 등
- 업무
 - 인권관련 사안, 행정기획 및 정책 중 인권관련 사안, 행정업무 수행 중 인권관련 사안, 인권관련 사안의 사전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한 현황보고 및 의견교환, 자료·현황의 공유
 - 시정 전반의 행정업무에 인권의 가치 적용가능성 모색
 - 인권정책의 실행방안을 강구, 각 부서에서 시행
- 기타: 분기별 혹은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 + 필요한 때에 임시회의
- 시장은 협의·조정 결과의 집행에 대한 책임(관리 감독책임)

참조: 인권도시의 규범(서울시의 경우)

-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인권기본조례가 조례명과 내용에서 모두 '기본'조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인권 관련 조례의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정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인권교육에 관한 보완 필요
 -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기구에 관해서 조례에서 유일하게 명시한 곳은 인권센터임(제11조 제2항 제4호).
 - 그러나 실제로 인권센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인권교육의 주체와 형태가 불안하다는 점 때문에 여러 보완 방식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참조: 서울시의 경우 – 기업인권 체제

- 기업인권에 관한 보완 필요
 - 기업인권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
 - 지방정부는 다양한 산하기구들을 가지고 있음
 - 현재 통상적인 인권기본조례에는 기업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음.
 -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인권기본조례에 기업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담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병행적으로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 18. 5. 29. 인권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권고
 - 인권담당관실(인권영향평가팀)에서 인권경영 지도점검 실시(현 2차)

참조: 서울시의 경우 – 인권규범의 정합성

- 인권기본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 기본적으로 조례들 간의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거나 인권정책의 방향이 일관적일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의 조례 정비의 필요성
 - 예를 들어 인권기본조례에 인권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장애인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권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인권기구들과의 관계 정비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평구 인권영향평가

서정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은평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향한 은평구 인권센터

은평구 인권센터장



차례

은평구인권센터소개

설치 운영 및 조직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

추진현황

조례규칙검토
소위원회

사례

장애관련

아동청소년관련

향후과제 모색

은평구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8조(인권정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인권정책위원회의 임무)

제10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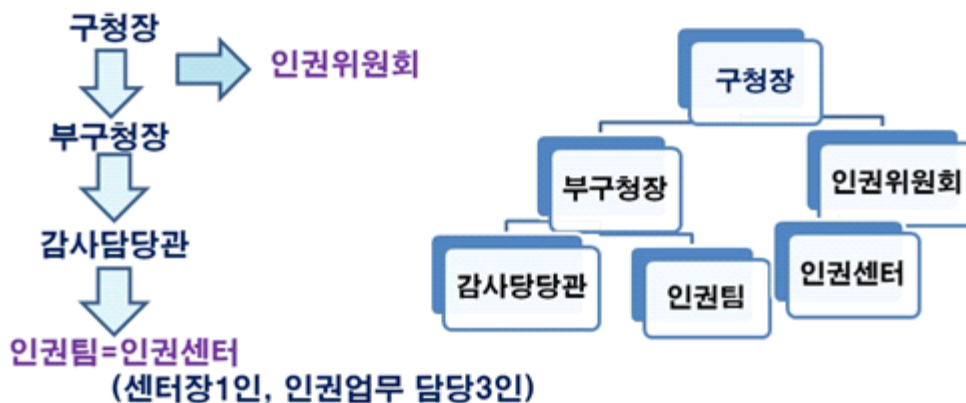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조사 연구 및 그 개선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인권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4.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 가.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 나. 은평구 소속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다.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5.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9.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제적위원 1/3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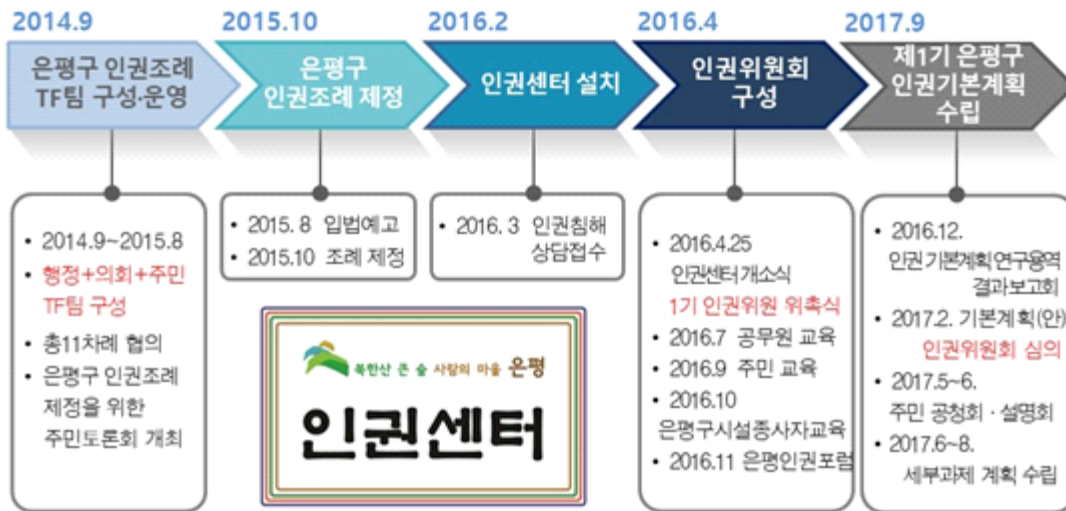


은평구인권센터 행정 체계

■ 은평구 인권행정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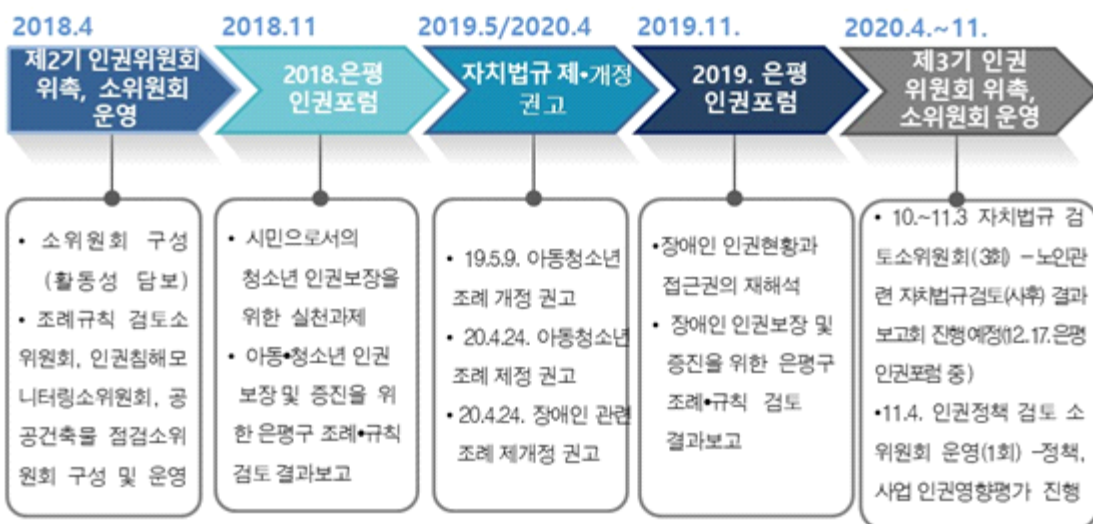
은평구 인권행정속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간판 인권의 세계적 발전의 맥락과 보편적 의제의 틀 안에서 은평구 지역인권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요한 갈릴, 인권의 역사발전 4단계 색채 인용)



인권위원회와 자치법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현황

년도	소위원회명	활동내용
2018년~ 현재	조례, 규칙 검토 소위원회	- (구성) 인권위원 4~5인 - (활동)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검토 아동청소년 조례 개정 권고(19.5.9.) 아동청소년 조례 제정 권고(20.4.24.) 장애인 조례 제개정 권고(20.4.24.) 노인관련 자치법규 사후 검토(진행 중, 12.17. 결과보고회 예정)
2018년~ 현재	공공건축물 점검 소위원회→ 인권영향평가단	- (구성) 인권위원 1인 + 외부 2~3인 - (활동) 공공건축물 현장 점검 및 수원시 사례 학습 등 인권영향평가 준비 2020년 인권영향평가단 :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은평구 실정에 맞는 업무 매뉴얼 수립 추진
2018년→ 2020년	인권침해 모니터링 소위원회→ 인권정책소위원회	- (구성) 인권위원 2인 + 외부 6~8인 - (활동) 보건소 및 지소 모니터링,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발간 2020년 인권정책 검토
2019년~ 현재	(주민 모니터링단) → 인권모니터링단	- (구성) 장애인가족 및 지역 주민 등 6명 - (활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화장실 운영 점검 2020년 인권 모니터링단으로 연계 통합



은평구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제8제8조 (인권영향평가)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기(2018~2022)은평구 인권기본계획 - Ⅲ(추진기반)- 1(인권의 제도화·체계화)- ② 인권영향평가 시행

◆ 2020년 은평구 인권센터 사업계획(감사담당관- 1538호, 2020.2.14.)



은평구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 활동

- ◆ 활동내용: 매년 주제를 특정하여 자치법규 사후검토
조례규칙 제·개정 시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 추진내용:
 - 2016. 조례규칙 소위원회 구성,
 - 2017. 조례규칙 검토범위, 운영방법 논의
 - 2018. **아동청소년관련 자치법규 사후검토**, 결과보고 발표
 - 2019. 아동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 마련,
장애 관련 자치법규 사후 검토 및 결과보고회
 - 2020. **장애관련자치법규 제·개정 권고안**, **아동청소년자치법규 제정 권고안**
노인관련 자치법규 사후 검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 추진주체: 인권위원회 자치법규(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
- ◆ 평가범위: 당해연도 집중분야 자치법규 전수조사, 사후 평가
- ◆ 운영내용:
 - 2018. 아동청소년조례검토 8회, 2019. 장애인조례검토 8회
 - 2020. 11. 3. 현재 노인관련 조례검토 3회
- ◆ 검토내용:
 - 기존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 및 개정 필요사항 파악
 - : 인권침해적인 용어 사용(법제처 용어 정비사항 반영), 상위법 저촉 여부(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차별적 내용 등 확인
 - 타지자체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제정이 필요한 조례 파악
 - 조례의 실질적 기능 확인(해당부서, 지역사회, 당사자 등 요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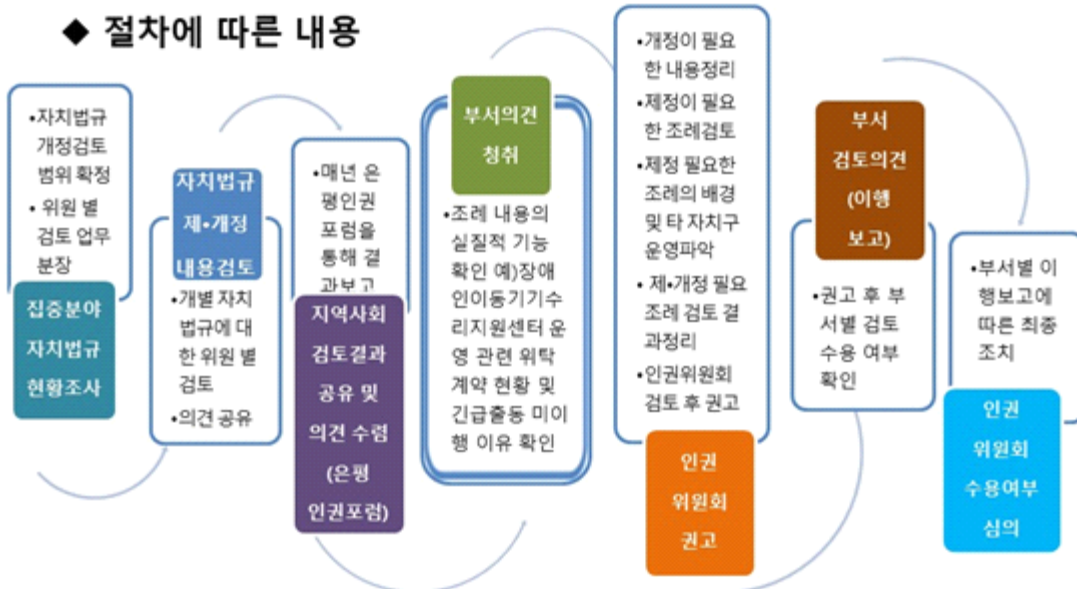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추진절차



◆ 절차에 따른 내용



◆ 사례 1: 2019년 장애관련 조례규칙 검토

① 자치법규 개정검토범위 확정 및 위원별 검토할 자치법규 업무 분장

검토한 조예·규칙 목록

순		조세명	지자체 제정비율
1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44%
2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4%(1개 지자체)
3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52%
4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80%
5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12%
6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88%
7	서울특별시	승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8%

② 개별 자치법규에 대한 위원별 검토 후 의견 공유

③ 조례 내용의 실질적 기능 확인 : 부서 의견 청취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위탁계약 현황 및 긴급출동 미이행 이유 확인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위탁 관련 주체 확인 필요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조사 -> 장애인복지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 청취
- 은평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 제정 배경(자치구별 조례마다 농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이 있고 청각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제정된 경우가 있음) -> 조례 제정 당시 지역 농아인협회와 협의한 법률적, 농인 용어로 확인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⑥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우선순위 검토
 - 은평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장애 관련 조례가 적음. 문화·체육·교육, 건강, 출산·양육, 고용 등 주제별 분류하기 어려움
 -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것은 전국단위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은평구 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어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은평문화재단이 만들어졌으나 장애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은평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와 같은 포괄적인 기본 조례의 필요성도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복지, 권익보장을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우리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가 있으므로 그 조례안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도 있음
- ⇒ 가족지원 / 고용 / 문화예술체육 / 인권 / 건강권
- ⑦ 지역 관련 기관, 단체, 활동가 의견 청취
 - => 1) 건강권 -> 2) 복지기금 -> 3) 고용촉진, 직업재활 / 문화예술 ->
 - 5) 장애인가정(임신, 출산, 육아)지원, 영유아 통합지원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⑧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배경 및 타 자치구 운영 현황 파악
- 은평구 장애인 공무원 현황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
 - 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등이 병존하는 타 자치구의 운영 현황 (주무부서, 위원회 별 역할분담 등) 조사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와 인권조례 간 제정 순서 파악 필요
- 타 자치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재원 출처
- ⑨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검토 결과 정리(붙임 문서 참조)
- ⑩ 권고 후 부서검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수용 여부	이행계획 및 결과
현행 조문	개정권고안	권고이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주민 자치와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 (수정)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코로나19 사태 진정된 이후 타 자치구와 형평성 맞게 향후 개정 예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⑪ 부서검토 (이행보고)에 대한 인권위원회 수용 여부 심의
- 가. 은평구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 권고

구 분	조 례 명	해당부서	수용여부
개정권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수용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수용
제정권고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수용
	4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	수용 (2020년)
	5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수용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조례	보건소	-

나. 은평구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권고

구 분	조 례 명	해당부서	수용여부
제정권고	1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수용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수용 (2020년)
	3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안전과 (안전기획팀)	불수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사례 2: 2018년 아동청소년 관련 사후검토, 2019년 제정 권고

1) 집중 주제 선정

- 2019년에는 은평구 자치법규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조례, 규칙, 규정 등 25개)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2) 검토 사항

① 개정 필요 사항: 기존 은평구 아동·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인권침해적 용어, 차별적 내용 등을 확인함

② 제정 필요 조례: 타지자체 조례와 비교를 통해 현재 은평구에는 없지만 향후 제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를 검토함

3) 진행 경과

- 소위원회 회의 8회, 전문가면담 1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진행

-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공청회 자료집(2016) 및 개선안 내부자료, 법제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2015)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조례는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보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 - '선도', '육성'과 같은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교육', '인권 보호',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은평인권포럼 결과보고 자료

권고 & 부서이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교육과(학교지원팀)			수용 여부	이행계획 및 결과
현행 조문	개정권고안	권고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u>	현행 조례는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보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또한 '선도', '육성'과 같은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교육', '인권 보호',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수정)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은 각 학교 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우리구 조례에 포함할 수 없음

2019년 권고, 부서이행 답변 자료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아동·청소년조례 개정 권고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

○ 부서 검토의견 확인 결과

인권 침해적 용어 및 행정 중심의 내용 개정에 관해서는 수용성이 높은 반면, 상위법과 다르거나 조례의 목적에 대해 권고한 경우에는 불수용 의견을 보임

○ 인권위원회 조례·규칙 소위원회 검토 결과 : 수용

- 부서 검토 의견 수용. 후속 재 권고 조치하지 않음
-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 관련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함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사후 검토

◆ 2020년 노인관련 자치법규 사후검토 과정

- 은평구 자치법규 중 노인 관련 법규(조례 12개)에 대한 진행(18~19년 경험을 토대로)
- 서울시 타 자치구 비교 검토 후 조례 개정 범위와 수준 확인/ 제정 필요 조례 결정

자치법규명	검토의견	타 자치구 등	검토자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다른 지자체 중 비교적 근래 제정 또는 개정된 구는 노인정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은평구는 2014.이후 개정이 없어 노인기본 정책에 대한 내용, 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 구정참여, 경로우대의 내용 등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참조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큼.	[상위법] 노인복지법 서울시 20개구에서 비슷한 제목의 조례 제정 다른 구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 복지위원회, 노인의 구정참여 보장, 사회활동, 경로당 사업, 구청장의 책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로구의 조례가 가장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참고할 만 함.	김00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9.08.14 조례 제1292호로 전부개정 진행, 전반적 내용이나 단어 등에 대한 교체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 타 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거의 없고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있음. 센터 이용자를 보다 인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항목 (비밀 유지, 구청장의 책무, 위탁기관의 책무 등) 만이라도 명시되었으면 함	-제정자치구 : 강남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초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오00



향후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운영체계

○ 추진계획 : 향후 평가 주체와 방법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사후평가 중심) ➡ 인권영향평가단(사전, 과정 평가 중심)으로

1단계(20년)	2단계(21~22년)	3단계(22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 자치법규 검토 인권영향평가(사후) • 인권정책 소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사전+사후) • 정책(사업) 인권모니터링단, 인권정책 소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정책(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은평구 조례·규칙 검토

장 우 원(은평구 인권위원)

1. 활동 개요

가. 은평구 인권위원회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

1) 구성

- 장우원(소위원장, 전 초등학교 교사),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혜연(법무법인 세현 변호사), 조미연(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선운(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소위원회 간사 : 은평구 인권센터 담당 주무관(1인)

2) 역할

- 은평구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제정·개정 권고 필요 사항 확인
- 은평구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반영해야 할 인권가이드라인 작성
- 은평구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판단 단체나 당사자 의견 수렴
- 은평구 판단 부서와 유기적인 의견 교환

나. 2019년 장애인 판단 조례·규칙 검토 사업

1) 주제 선정 배경

- 2019년도 서울시 협치주제인 '장애인'과 판단하여 은평구 자치법규 중 장애인 판단 법규(조례, 규칙, 규정 등 7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2) 검토 사항

- ① 개정 필요 사항: 기존 은평구 장애인 판단 자치법규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인권침해 우려 용어나 내용, 차별이 드러나는 용어나 내용 등이 있는지 검토함
- ② 제정 필요 조례: 서울시와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하여 현재 은평구에는 없지만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향후 제정이 필요한 장애인 판단 조례를 검토함

3) 진행 경과

- 소위원회 회의 7회 및 온라인 자료 검토 및 의견 교환
-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공청회 자료집(2016) 및 개선안 내부자료, 법제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2015)
- 2020년 협치 주제인 '노인' 판단 외부 초청 강연 1회 실시

4) 검토한 조례·규칙 목록

순	조례명	지자체 제정비율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원 판매대, 매점 및 식품료품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4%(1개 지자체)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52%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복지 위원회 조례	8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의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12%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88%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8%

[참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장애인 관련 조례·규칙 통계

※ 자세한 조례 내역은 부록 참조

서울시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23	9	9	8	9	9	6	10	5	8	8	7	6	8	8	10	5	8	8	15	10	9	7	9	17	6

가. 기 제정된 은평구의 조례 검토 결과]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문	검토 의견	비고
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추가)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책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함께 생활하는 지역 구민들의 동참도 필요함. 구민들이 발달장애인과 복지정책이행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책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위법에도 ‘국민의 책무’가 있음. ‘책무’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또 조례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함
2-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계획과 계획에 따른 수행이 중요함.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둘 필요 있음→서울시의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u>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	다. 기본계획은 (이하 동)	
2-2		*신설(추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위해 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3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u>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u>	제7조(복지단체의 지원·확대)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u>복지단체를 지원하고 확대하여야 한다.</u>	‘보호’, ‘육성’과 같은 행정 중심의 권위적인 용어 대신 ‘지원’, ‘확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의 경우 ‘제7조(지원 사업)’으로 ‘지원’이라는 용어 사용
4	-	*신설(추가)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와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장애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준수의 의무 포함 필요.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현행 조문	검토 의견	비고
1-1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 ² 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관에서 담당하고 민간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민간 전문가들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제 문제를 함께 심의하고자 한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지 않음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안)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 또는 의사표	장애인 중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기 위하여 장애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나 후견인으로 한다.	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나 후견인 또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안) ④ 제3항 제1 내지 2호의 위원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당사자 및 관련자로 구성되도록 한다.(추가)	위원회에 다양한 장애 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장 규정을 두도록 함
3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통합할 필요 있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사유를 불충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품위손상'이라는 문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님. '품위손상'은 그 정도가 객관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음
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관 합치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취지상 부위원장의 지위를 은평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구성)과 관련해서 검토 필요

나. 은평구에 없는 장애인 판단 조례규칙 검토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현재 전국 44개 지자체, 서울 6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제정, 운영 중인 대부분의 조례에서 “고용 의무비율 확대”라는 조항을 두어 의무고용 비율을 상위법보다 확대하고 있어(법상 34/1000, 조례들은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장애인고용 비율을 늘릴 수 있으므로 큰 의미 있음

나) 또한 조례의 내용이 의견수렴절차, 고용계획수립, 의무고용비율, 고용현황조사,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고용사업자 지원,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조례가 필요함.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체에 규정이 자

세하게 있지만 조례에서는 지자체 강의 의무고용, 지원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큼

2)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전국 96개 조례, 서울시 20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는데 은평구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신청을 하면 지자체 장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지원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 장비,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장, 기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새로운 고용창출도 필요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은평구에도 장애인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제정 필요성이 있음.

나) 현재 은평구에서도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권리헌장(장애인인권헌장),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그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재생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생산권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나) (출산장려금에 초점이 아닌) 장애인의 모부성권(재생산권리) 보호와 차별금지를 담은 조례제정이 필요함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가) 인권센터에서 동 조례가 제정된 광진구와 동대문구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두 곳 모두 조례가 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성과도 없음
- 조례에 센터 설치 등의 규정은 없고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

나) 은평구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할 여력이 미비한 편임(활동가들이 여러 단체에 중복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김선운위원님과 협의하여 개략적인 중복 수치 제공하면 더 좋겠음(삭제)

다) 판주도이기는 하나 은평구에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 서울시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 장애인과 함께 하는 데마여행 연 3회

-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별한 은평마을 여행 실시 등
 - 라) 장애인 관건하여 기본적이고 시급한 조례 제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차후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홍보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필요 있음
- 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조례
- 가) 은평구에서 본 조례를 신규 제정을 한다면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바람
 - 장애인 체육대회 수상을 염두에 둔 전문 선수 발굴지원보다는 생활체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내용으로 조례 제정
 - 나) 조례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조항
 - (강북구 조례,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구로구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④ 구청장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함
- 6)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조례
- 가) 인권조례와 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 둘 다 제정되어 있는 8개 구의 현황
 - 조례 제정순서: 모두 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후 인권조례가 제정됨.
 - 위원회: 양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되어 활동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 기본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조례에 설치 규정이 없거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업무 중복 및 관할 분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 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가) 2019년 은평구에 있는 서울재활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력하여 지역의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현재 조례제정 7곳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임

- 2018년 5월30일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진행. 장애인 주치의제도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하여 전반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세워 교육, 상담 등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 본인부담, 자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8)3개 → ('19)3개 → ('20)4개 → ('21)4개 → ('22)5개, 총 19개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임신과 출산 정보도 제공해 임신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유, 산후 회복, 신생아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성 보건 의료서비스도 제공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18)8개 → ('19)20개 → ('20)20개 → ('21)22개 → ('22)30개, 총 100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및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장애인관련 법규 비교표>

<부록>

순번	자치법규명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자치 구계	제정 비율
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44.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1	1	1	1	1	1		1			1			1			1				8	32.0%		
2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양육 지원 조례	1											1		1										2	8.0%		
	발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44.0%		
3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1																						1	4.0%		
	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1																						1	4.0%		
4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 에 관한 조례	1			1				1						1										4	16.0%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 례																								0	0.0%		
6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 례																								0	0.0%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					1									1				1					4	16.0%		
8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 원 조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	80.0%		
9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1					1									1	3	12.0%		
10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취직관람석 설치 · 운영 조례		1				1	1				1		1				1	1	1	1			1	9	36.0%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1	4.0%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진점검(검사)에 관한 조례				1						1									1			1	1	6	24.0%		
	장애인 (보조기기) 동시기(활 용)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52.0%		

83

2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순번 1~23번은 서울시 조례

<법례>
2. 순번 밑은 서울시 조례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
-조례명칭은 일치하지 않으나 내용상 관련 있음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검토 결과 ('18. 은평인권포럼 공유)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은평구 조례·규칙 검토

조혜인(은평구 인권위원)

1. 개요

가. 은평구 인권위원회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 소개

1) 구성

- 조혜인(소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혜연(법무법인 세헌 변호사), 장우원(구 산초등학교 교사), 조미연(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은평구 인권센터의 협력

2) 역할

- 은평구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제정·개정 권고 필요 사항 확인, 은평구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반영해야 할 인권가이드라인 작성

나.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규칙 검토 사업

1) 집중 주제 선정

- 2019년에는 은평구 자치법규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조례, 규칙, 규정 등 25개)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2) 검토 사항

- ① 개정 필요 사항: 기존 은평구 아동·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인권침해적 용어, 차별적 내용 등을 확인함
- ② 제정 필요 조례: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를 통해 현재 은평구에는 없지만 향후 제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를 검토함

3) 진행 경과

- 소위원회 회의 8회, 전문가면담 1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진행
-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공청회 자료집(2016) 및 개선안 내부자료, 법제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2015)

2. 검토 결과

가. 개정 검토가 필요한 법규 내용

- 기존 25개 자치법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 검토가 필요한 9개 항목을 확인하였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13조(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5. <u>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한</u> 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u>국민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u> 등	5. <u>청소년 범죄 유발업소 등 유해한</u> 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u>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u> 지원활동	- ‘우범’, ‘국민’ 등은 대상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용어이므로 수정이 필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u>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u>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u>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청소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조례 제정의 목적인데, 현행 조문은 이것을 수단으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기술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임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 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시행규칙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② <u>수강신청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수강치 못하는</u>	- 사용자의 책임(사용자의 의사)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것	- 현행 조례 제8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해서는 조례 규정 없이 시행규칙에만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사용료 반환 기준을 찾아보는 주민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거나 강퇴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한다.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별표3]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강습료의 반환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또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모”를 “보호자”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2조의2(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 제2조의2 제4호 삭제	- ‘구 시책사업 협력’을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청 중심의 요건으로 정당화 근거가 희박함. 지역공공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제2조의2 조항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조례는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보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 - ‘선도’, ‘육성’과 같은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교육’, ‘인권 보호’,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

			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u>학생 선도·보호</u> 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u>학생 교육 과 보호</u> 를 위한 기관 협력망 구축	- 권위적인 용어인 '선도'보다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방안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 호선한다.</u>	-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관에서 담당하고 민간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동 분야에 관한 민·관 전문가들이 아동복지에 관한 제 문제를 함께 심의하고자 한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호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특별시 성북구/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조례 공통사항			
현행안	검토안	검토이유	참고자료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품위손상'	- '품위손상' 삭제	-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품위손상'은 그 의미가 모호하며 남용될 여지가 있음. 또한 '품위'는 위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대표하는 사유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품위손상'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상 부적절하며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보다	
예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u>풀위손상</u> , 장 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 이 바람직 예시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 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나. 제정 검토가 필요한 조례

- 은평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이 꼭 필요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제정에 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한 조례로 선정하였음

1)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 내용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역사적으로 약자인 아동, 청소년의 노동력이 착취되거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미흡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선언하는 것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취약하고 수동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근로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2012년 제정하였고, 부천시의 경우에도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형태를 달리하지만 아동, 여성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음. 서울시 조례의 규율내용을 보면 자유, 교육, 문화, 안전, 노동, 참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 청소년 인권의 내용과 보호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보기에 해당함.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인권신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근거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이 외에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은평구는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위 조례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안점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 아동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 타지자체가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우선, 은평구 조례의 경우 근거법령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중점이 여성, 성폭력 등에 있는데 타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조례는 근거법령이 「아동복지법」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와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주무부서도 아동관련부서와 여성관련부서로 다름.

○ 이에 은평구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은평구의 현황을 살펴본바 은평구가 서울시 타구에 비하여 아동학대발견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학대조사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은평구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수가 많으며 가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부족, 스트레스 및 사회적인 고립, 알코올·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특별히 취약한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두고 있고 신고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발견률이 가장 높은 은평구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현재 제정, 시행중인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아동의 인권은 스스로 보호하기 어렵고 학대의 경우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모들의 부모교육, 상담 및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감시와 구조, 보호의 요구가 절실한 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작으로 은평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구별 3개년 신고접수 현황 및 아동학대 발견율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자료)

기관	구	신고접수 건수(아동학대의심사례)			구별 인구수	아동학대 발견율(%)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 동남권	강동구	77	97	86	72,920	0.46
	송파구	37	109	80	114,066	0.39
	강남구	52	125	80	98,650	0.47
	서초구	44	42	45	83,520	0.15
	동작구	25	36	48	57,948	0.24
	관악구	53	155	126	60,923	0.78
동부	중구	20	56	39	14,798	0.43
	성동구	32	88	58	44,667	1.09
	광진구	51	183	211	51,974	2.05
	중랑구	180	163	173	57,799	2.00
	동대문구	85	112	154	48,998	1.51
	노원구	94	206	219	100,344	1.39
강서	강서구	133	194	234	96,077	1.32
	양천구	123	149	229	89,182	1.15
성북	성북구	169	146	166	71,734	1.51
	도봉구	80	183	185	52,667	2.99
은평	은평구	153	331	317	76,658	3.70
	종로구	27	53	59	20,502	1.95
	강북구	66	143	203	45,098	2.52
영등포	영등포구	81	98	95	52,410	1.50
	구로구	64	364	102	65,585	3.73
	금천구	92	77	110	32,115	1.61
마포	마포구	96	132	124	58,110	1.75
	서대문구	69	114	155	46,249	1.83
	용산구	54	84	94	31,852	1.60
총 계		1,957	3,440	3,392	1,544,846	12.10

※ 아동학대발견율(%) 계산식 : (아동학대판단사례) / 만0세-18세 아동인구수 * 1000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 ~ 18세 인구현황 (17년도 2분기)

SESSION

세션

2

지방의회와 인권

좌장 박경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 인권도시로 전환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과제

손민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부평구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도전

유경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윤재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 열린토론





인권도시로 전환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과제

손 민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천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

인천시가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고민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인천시의 "주인" 아닌가?
가계의 주인은?
집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공무원들에게 물었다.

인천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천시의 주인은 인천시민 이다.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인천시민들이 본인들 사장님을 뽑아주니까~~^^

“사장님” 을 “ 뽑아 주는 것 ” 에 그치지 말고,

1. 사업계획을 하고, 돈도 써보자!

“ 인천시를 위해서 “

2.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보자!

“조례” 그게 뭐가요?

「조례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무로 예산의 편성, 집행에 근거가 되는 것”

「조례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입장」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수 없다.”

사례7)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북국가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난민의 지원)** 난민은 법상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등하게 사회 제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회 생활하기 전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한다.
- 제6조(난민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무시장, 시 난민 지원담당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난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 등 난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무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락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사기는 난민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난민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결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난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2. 난민신청 신청 지원 및 절차·행정 정보 제공
3. 난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4.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난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7.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례8)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공동체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②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나이, 성별, 장애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문화적 차이 존중”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 제3조(사회구성원에게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로서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자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조·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제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다양성 정책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의 요소,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지적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정보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조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정책지침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회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차, 이동, 청소년,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인대 형성과 문화 교육
2. 사회구성원간 존중과 교류에 관한 교육
3. 인간존엄성에 도래한 교육
4. 문화적차이 존중을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사항

⑤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은 **제9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0조(문화다양성의 날) 시장은 “법” 11조에서 정한 ‘문화다양성의 날’ 연수에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금)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행위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문화다양성 계획 및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위해 부천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모든 일에는 **반대**가 있음.

공무원들 좋아할리가 없음.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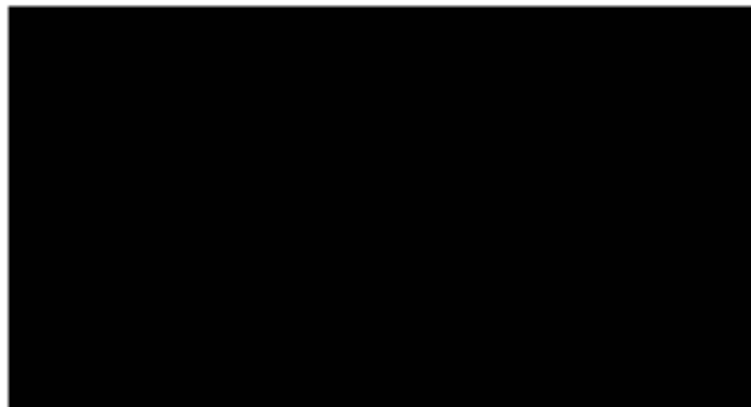
그러면.....

“조례” 어떻게 만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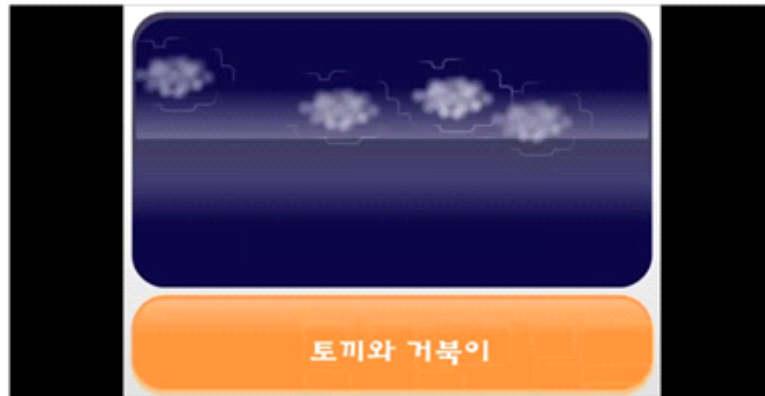
조례 만드는 순서..... “쉽습니다”

모이기	▶ 불편했던 경험, 바꾸고 싶은 것, 이러면 좋겠다 ▶ 공통관심사를 갖춘 사람
전력수립	▶ 관련법규, 유사조례 검토 ▶ 연대해 줄 수 있는 단체, 사람 찾아보기 ▶ 세부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 시·구의원 섭외 ▶ 전문가 섭외 ▶ 공무원 섭외 ⇒ 토론회 개최 전 충분한 숙의 필요
T/F 구성, 활동	▶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사업의 공감대 형성 및 수위 조정 ⇒ 시·구의원 역할 (민·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조례 발의/제정	▶ 구의원 발의 ▶ 방청 참여
실행 모니터링	▶ 지속적인 모니터링 ★ 가장 중요한 일

「운동이 시작되는 법」



『토끼와 거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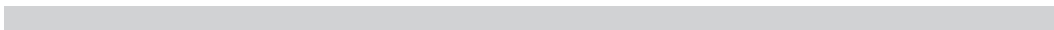




부평구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도전

유 경 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부평구 인권 조례 제정 의미와 도전

유경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작지만 소중한 삶의 변화’

저의 후보시절 슬로건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사회는 크고 세고 다수인 것에 치중하다보니 작은부분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야말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소확행”입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잔뿌리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 목소리가 작아 들리지 않았던 문제, 아니 작은 소리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작은 변화의 힘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구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조례도 발의 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의 시작과 끝점에서 힘들게 느끼는 벽은 인권 문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주민주권,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공론화 등등 이런 일상이 생활이 된 우리동네, 이런 일상에 인권 문제가 우선시 되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갈 것 입니다.

10월 27일 부평구에서는 재활용 수거어르신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광주에서도, 잇따른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분들을 그냥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에만 멈춰있진 않은지..

이제는 우리들이 수거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장애인부모연대 회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부모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비만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 분들의 그러한 문제는 자녀의 문제에 가려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에는 인천에서 거의 없는 아동 양육시설이 3곳이나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은 많은 아동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어떠한 추가 지원이나 대책마련도 없이 긴 시간을 그렇게 방 안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 보건당국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니 시설에서 꼼짝 말라는 공문이 인해 그들은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시설의 아이들과 복지사들이 방치되고 있어 그분들의 인권이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구의원이야 말로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의 관점으로! 중립의 자리가 아닌 그들의 편에서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될 때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평구는 제가 발의하여 지난 8월 3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회의 자문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에도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감수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 입니다.

부평구의 복지예산은 64%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들의 인권현황이 어떠한지, 권리보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접근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K-방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거버넌스의 역할과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지자체, 성소수자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익명검사를 결정한 서울시의 사례또한 인권에 기초한 행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와 소통창구의 역할은 물론 **인권 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권리 구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때 뿐 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왼손 잡이입니다. 8월 13일은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왼손잡이의 날은 왼손잡이의 인권을 신장하고, 왼손사용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의 어린 시절은 여러가지 편견이 존재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 감수성이 낮았던 우리들은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편견과 차별인 줄도 몰랐던거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상은 지배하는 자, 그리고 주동하는 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보편정서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스며서 인권에 위배되는 많은 일들을 겪고 넘기기도 합니다.

인권의식은 죽을 때 까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이번 인권조례를 계기로 잠자고 있는 인권의식을 깨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평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윤재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윤재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들어가며....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 노동현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실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역 사례를 접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 지정 업무외의 억지 근무 등 부당한 노동인권침해를 겪으면서 부당한 대우임을 알면서도 이중 76.1%의 상당수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인권 상담기관등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뉴 낮게 조사되었다는 “2019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다. 라는 인권의 정의에도 위배되므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최소한의 장치인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교육 및 청소년 노동현장의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구제방안을 마련코자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2.]

(제정) 2020.05.22 조례 제1241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아동청소년실
연 락 처 : 032-770-608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형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형장(이하 “구형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20.5.22.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elis.go.kr/evlsdk/evlsaw/loiklaw/b1126/laws_list_new_ien?mode=prin 2020-11-23

지난5월22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과 주민들로 본회의장 방청객은 채워졌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원안가결 되었다. 원안가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2018

년도부터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제도적 마련인 것이며 이는 시대의 흐름이자 상식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근거로 반대하는 이들은 본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리지어 의원사무실로 들어와서 본 의원을 애워싸고 학생이 노동자냐.. 학생을 노동자로 취급하지마라... 인권이랍시고 동성애 문화를 조장하느냐... 등등 “청소년노동인권”조례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입법기관인 의정활동에 대한 기만과 정서적 폭력을 자행하며, 그날 이후로 11일 동안 의회 앞에서 조례제정을 취소하라는 1인 시위 와 문자폭탄으로 의원 개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서슴치 않았다.

청소년이 공부를 하면 학생이고,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면 바로 노동자가 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고 나면 결국 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청소년노동인권조례”와 무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래야 원치 않는 노동인권침해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잘못된 노동 현실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노동현장에 처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에게도 중요하다 하겠다.

나가며....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어른들로부터 듣게 되는 반말,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실감과 우울감, 상처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인천 또는 타 지자체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켜주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SESSION

세션

3

시민사회와 인권

좌장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회복지, 이념을 넘어 권리로**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 **열린토론**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윤 대 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도시 인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과제

윤대기 변호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기념일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영어표현은 Rights of man(남성 권리)이었으며, 1948년경에 와서야 Human rights(인간 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노동자,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흑인, 이주민, 난민, 그리고 성소수자, 인도적 체류허가자등까지 그 주체로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포섭이 아닌 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포섭은 상대방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음을 의미합니다. 현시기 우리는 우리에게 포용이 필요하고, 우리사회가 포용 사회로 나아가야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옹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옹호는 보호뿐만 아니라 지지, 지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옹자는 포용의 포자와 같이 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결국 옹호는 단순히 대상으로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나가 역량강화(Empowerment)까지 이야기합니다.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립하고, 소통하고 연대할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인권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생활의 중심이자 현장이며, 복합적인 행정이 펼쳐지는 도시와 결합하여 인권도시(Humanrights city)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협치와 결합하여 인권마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단위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는 50인정도로 구성되며, 분과를 둘수 있고,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예산도 편성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권 역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등 수축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불평등과 사회문제들은 더욱 증폭되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사각지대가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위험과 감염의 위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만을 강조하여 거리만을 두고 격리만을 하게 된다면, 감염병의 전염은 일시적으로 막을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문제들은 더욱더 증폭될 것입니다.

인천시 인권위원회도 지난 1년7개월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인천시 인권위원회에는 인천시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자문을 하여왔고, 코로나19 팬데믹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러차례에 걸쳐 인권토론회등을 개최하여왔고, 이주민관련 인권토론회도 12월 3일 인천시의회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복지재단등과 협업도 추진하여왔고, 인권단체 네트워크 1차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도 12월 1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전담조직등이 활동하면서, **만연해있던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사라졌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인천시청 1층에 인권상담실이 개소되기도 하였으며, 인천시에는 체육인과 사회복지종사등을 비롯한 많은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행정과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인권감수성도 향상되고, 인권존중 문화도 조성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구.군중 미추홀구와 서구에 이어 부평구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동구와 남동구에도 인권기본조례가 발의되어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양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도 하루속히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전담조직이 활동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모든 구.군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권전담조직이 생겨난다면 인권도시 인천으로 나아감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천시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보호업무등을 담당하게 되는 인권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인권팀에서 인권행정과 인권보호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인권보호업무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할 인권 센터(최소한 인권보호팀)가 창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 BBC가 끈대에 대하여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를 떠나서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끈대라고 부르고 싶고, 이러한 생각에 기반한 행정을 끈대행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칸막이로 막혀 있는 끈대행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려 있는 통섭행정을 바랍니다.** 주역에 의하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궁하면 변해야하고, 변하려면 통해야 하고, 통하면 오래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변해야합니다. **방역과 통제가 필요할수록 인권과 소통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권에 기반한 시민소통과 협치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권에 기반한 공동체의식이 발현,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창의성은 뇌의 멀리있는 영역간 신호를 주고 받을 때 발생하고, 사회에서의 창의성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때 배가된다고 합니다. 다양성 존중이 필요하며,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창의성을 해치고, 국가와 도시, 국민과 시민에게 피해를 줄뿐입니다. 하루속히 평등법과 국가인권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요구가 중요하며,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인권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인권단체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6개 인권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4일 다시 모여 인권단체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지 워크숍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단체 네트워크는 상호 소통과 연대의 장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인천시 인권행정과 정책등을 정하는 현장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평가의 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광역시자체 인권협의회 차기 의장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 비하여 인권기본제정도 늦고, 인권위원회등 활동도 늦었지만, 오히려 다른 광역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늦은 만큼 더욱 노력해왔고, 이러한 열정, 노력과 성과가 인정되어 전국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도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9월경부터 전국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권도시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활동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제1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1. 우리는 인권향유자이자 인권옹호자다.

1. 우리는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한다.

1. 우리는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 및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개발하고, 이에 협력하고 함께 한다.

1. 우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2020년 제2회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위 약속을 지켜왔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제2회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에 함께 하였으며, 2021년 제3회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1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의 부제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인천시 인권옹호자컨퍼런스의 부제는 ‘인권도시 인천, 한걸음 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인권도시 인천을 향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용과 인권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한, 우리 모두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이념을 넘어 권리로

김 광 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이념을 넘어 권리로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ideology)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논의되었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념에서부터 반대하는 이념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러한 이념적 접근이 주로 학계에서 다루어지다가 정치권에서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념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적 접근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가장 타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나 점차 그 중심에서 인간이 제외되고 오직 효율만 강조하는 이념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같이 모든 인간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제한 조치 등이 모든 분야에 힘겨운 영향을 주는 등 환경적,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나 문제 앞에서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공동체성과 인간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존재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환경과 사회구조 아래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논쟁이 아닌 오직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래 사회복지의 출발은 인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인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로 권리라는 용어로 사용해왔다. 현재는 인권이 확장되어 4세대 인권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1세대 인권을 자유권, 2세대 인권을 사회권, 3세대 인권을 연대권(집단권), 4세대 인권을 환경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자유권만을 인권으로 표현하고, 사회권은 권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회권이 바로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권의 핵심이었다.

2. 사회복지 관점과 이념의 한계

사회복지의 영어로 Social Welfare이다. 여기서 welfare는 다시 well + fare로 구분된다. well은 ‘잘’이란 의미가 있고, fare는 ‘지내다’의 의미가 담겨있다. fare의 ‘지내다’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안녕’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의 ‘안녕’은 ‘무탈’한 상태인 것이다. 즉, 각자가 생각하는 평안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 ‘안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녕’의 상태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안녕’이 개인적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상태가 보장되는 수준이 전제되고 있다. 즉, ‘안녕’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

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가 반드시 해결된 후에 비로소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안녕’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복지 welfare는 ‘잘 지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란 다룰 때 그 핵심적 가치는 모든 사람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고, 만일 사람이 잘 지내지 못할 때 잘 지내도록 개입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지내고, 잘 못 지내게 되는 것일까?’ 이런 ‘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돈, 건강, 취업, 심리·정서, 결혼, 자녀, 종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잘 지내든 잘 못 지내든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란 사회가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회를 다루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나 욕구에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복지 또는 인간복지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왜 사회복지라고 할까? 물론 개인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가 지닌 근본적인 철학은 이런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가 아니다. 사회복지가 지닌 정신은 어떠한 개인이라도 그 필요와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구조로부터 유발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에 닥친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사회구조로부터 유발되었기에 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개인의 필요는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 사회적 위험 등에 대해서 공동체가 즉,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란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접근하게 한다.

이념(ideology)은 사전적으로 ‘한 시대나 사회 또는 계급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념, 믿음, 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생철학, 생활양식, 정치·사회운동 등을 통하여 개발되고 구체화된다. 동시에 이념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체계나 생활양식, 정치·경제·사회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이념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사회복지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념이 정치구조에서 진보, 보수, 중도로 나뉘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한다.

그동안 사회복지란 이념적 틀에서 이분법적으로 바라왔던 학계, 정계의 시각은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코로나 19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위험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적 잘못이 아닌 환경적이고 사회적 요인으로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든 인간 누구에게라도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진보 이념은 사회복지 발전을 지지하고, 보수 이념은 사회복지란 반대하거나 소극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회복지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네 부모님도 자녀가 가난하게 살거나 형편이 어려울 때 진보 부모님으로서 그 자녀를 돕거나 보수 부모님으로서 돕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부모라면 무조건 어렵게 사는 자녀를 도울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은 빈곤한 국민과 위험에 노출된 국민 즉,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념이 아닌 인권 측면에서 무조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욕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념적 접근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권리로서 사회복지

권리로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요구할 힘을 갖고 있으며, 그 상대방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가능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우선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근거로서 인권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역사적이면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시민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은 주관적이거나 정치적이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으면서 객관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1) 인권과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권리라는 논의의 출발은 인권에서 비롯된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실천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와 인권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인권(human rights)은 사람의 권리이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가 인권이며,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통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 이해되어 어떠한 국가나 사회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당위적 권리로 인식됐다.

이러한 인권은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이 도덕적 권위를 갖고 개별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라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 조치로서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권의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조약을 채택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권 관련 국제조약으로서 인권이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전자를 자유권 규약 또는 B 규약이라고 하며, 후자를 사회권 규약 또는 A 규약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자유권은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유인을 전제로 한다. 이는 천부적 권리인 자유권이 중세 봉건제적 질서를 붕괴시킨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유럽 전통주의자로 대표되는 보수적 기득권층과의 투쟁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는 저항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권 보장과 더불어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표현되는 사회권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특히 사회권은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인권이 국제적 수준에서는 도덕적·가치적 차원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화되어 그 핵심내용을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에 두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게 된다.

인권은 단지 바람직하거나 호소하는 선언으로서가 아닌 규범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형태로 규범화시켜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인권이 법으로 규정될 때 비로소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고 국민은 이를 보장받게 되는 권리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권은 선언과 법률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권 영역을 집합적 권리로 확대하여 인권이 환경권, 정치적 안정, 경제개발에 관한 개념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인권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다루고 있다. 국제인권조약 중 사회복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사회복지란 사회권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의 상호 관련성을 맺게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점에서 인권을 사회권으로만 한정시키지 않는다. 사회권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는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자유권이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의 가치라면, 사회권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서 국가의 개입 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권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면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커지고, 적극적 자유의 보장은 강화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는 것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세나 사회보험료의 증가가 수반되어 이를 부담하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 사회복지 급여수급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어 적극적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권 보장이 곧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되어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권 보장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를 거쳐야만 실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는 등 자유권의 보장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만 한다.

한편 사회복지실천은 욕구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욕구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은 주어진 자원의 제약 속에서 편의적으로 욕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존엄성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욕구 중심 관점보다는 인권관점으로서 욕구충족을 위한 분배나 서비스를 당사자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힘이나 자격으로서의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보장은 권리로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당하고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곧 인권보장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으로서 제도적 도구가 되어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권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객관적 규범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시민권과 사회복지

인권의 개념이 철학적 논쟁에 따라 주관적이어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는 시민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유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게 되어 시민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권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집단, 가족, 개인 등에게 집합적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정치적 구성원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권 개념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권리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영국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에서 찾을 수 있다.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은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개별권리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완전한 시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각 개별권리와 관련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의 초기 형태는 공민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계급이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개념이다.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보장,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 등을 의미하며 주로 18세기에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민권은 부르주아지인 시민계급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시장체계 속에서 모든 시민은 대등하게 자유를 누리며 시장인으로서 존재했다. 이 당시 법은 순전히 부르주아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이 시기의 자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평등은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중심 가치를 두는 것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제1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러한 시장의 기능이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할 때 즉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질서가 혼란되고 시장의 역할을 저해할 때만 개입하는 야경국가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평등은 불평등의 제거보다는 불평등을 수정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었으며 국가개입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권은 정치권의 형태로 나타났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정치권은 19세기에 발달한 것으로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나타내는 제도가 입법부와 지방의회이다. 이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이룩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신흥자본가 계급이 신분제 의회에 편입되어 조세에 대한 교환의 조건으로서 정치권을 획득

하였다. 즉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고 출생성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투표권 중심의 정치권은 점차 노동계급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공민권을 경제영역에서의 시민권이라 한다면, 정치권은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이다. 시민권 발달의 초기에는 공민권이나 정치권 모두 구 지배계급인 봉건 계급과 왕권으로부터 시민계급이 독립하기 위한 권리체계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대립과 갈등은 노동계급에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치권은 신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에 대해 노동계급이 쟁취해낸 전리품이었다. 따라서 정치권은 민주주의적 시민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투표에서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 사유재산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수직적 계급지배 현상을 낳게 되지만 분배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위한 정치권은 수평적 평등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등장한 시민권이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범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권은 공민권과 정치권을 토대로 하여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권은 공민권을 토대로 하면서도 자유권적 공민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치권을 통해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친노동 계급적 입법이 이루어져 사회보장제도 등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노동계급과 더 나아가 국민 개인의 생존권 이념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권리체계들이 곧 사회권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회권의 발달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확립하게 했다. 공민권 단계에서 단지 야경 국가적 입장에 놓여 있던 국가는 이제 적극적 개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복지국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기존의 권리가 기존의 국가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만을 강조했다면, 사회권은 점차 개인의 행복과 복지 및 복지를 충족시켜 줄 수단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등의 세 권리가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3) 법과 사회복지

(1) 법적 접근의 중요성

권리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법적 관점에서 그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법률로 명문화된 권리라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누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가장 유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권리법력 설로, 이에 따르면 권리는 인간 이익의 충족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힘이다. 즉, 권리는 법규범 및 그 체계인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힘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역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확보될 수 있다.

제도이론(institution theory)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제도이론은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조직의 정책 등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등의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서 조직은 합법성의 원천이 되는 제도화된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게 되며 이는 곧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위해서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자격, 급여,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2) 헌법상의 기본권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인권과 시민권 등의 권리 개념은 기본권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나타난 기본권의 내용은 <표 1>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1>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기본권의 유형	구체적 내용	인권 영역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권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자유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자유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권, 근로권, 근로3권,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건강권	사회권

출처: 김광병(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연구, 7(1), p.94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은 시민권론에서 말하는 공민권에 해당하며,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권 또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다¹⁾.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로서 사회복지라 할 때는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받아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4) 법률상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형태: 수급권

권리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수급권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권이란 개별사회복지법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수급권이라는 표현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개별사회복지법에 수급권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해당 법을 통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공통적으로 수급권이라고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회복지법에서 수급권 즉,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로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의 이념과 원리는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혹은 복지권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이념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개인의 인간으로서 생존 혹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수급권은 결국 생존권 혹은 복지권을 실현하는 구체적 개개인의 권리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헌법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며 그것을 이어받은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급권의 구조는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수속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권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구체화한 입법에서 명시된 급여 및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법률에 명시된 수급권으로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종류인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서비스, 기회, 권력 등이

1)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이 있다.

개별사회복지법률에서는 급여, 복지조치, 보호조치 등으로 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적 권리의 내용이 개별사회복지법률에서 모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일부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절차적 권리는 수급권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상의 절차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침해된 실체적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이 법률에서는 권리구제로 나타나고 있다. 권리구제는 크게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청문 등이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소송이 해당된다.

수속적 권리는 수급권이 결정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담, 조언, 정보제공, 공지 등 부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에 상응하는 권리이며 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수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3가지 수급권 구조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용하는 형태로서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학계에서는 수속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 다만 절차적 권리를 사전권리와 사후권리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사전권리가 수속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인천광역시 인권조례 제정 현황

〈표 2〉 인천광역시 인권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내용
본청 (7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남동구 (2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계양구 (1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동구 (1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미추홀구 (3개)	*인권보장 및 증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부평구 (2개)	*인권보장 및 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서구 (4개)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연수구 (2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중구 (1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표 2>와 같이 인천광역시 본청 및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고 총 23개가 제정되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강화군, 옹진군이였다.

인천광역시 본청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개, 미추홀구가 3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가 각각 2개, 계양구, 동구, 중구가 각각 1개씩 제정하였다.

인권보장의 대상을 살펴보면, 시민(본청), 구민(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고령자 경비원(본청), 발달장애인(본청, 남동구, 연수구), 사회복지 종사자(본청), 체육인(본청)으로 나타났다. 본청의 경우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시대적 상황을 즉각 고려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본청,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본청, 동구, 미추홀구,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서구)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유일하게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법령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 조례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5. 나가는 말

사회복지가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진정한 의미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럴 때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당당히 추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

<참고문헌>

김광병 외 5명(2006),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김광병 · 김수정(2012),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김광병(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배와옥 외 3명(2015),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

손병돈 외 6명(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성원

최승원 외 6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인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조 선 미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인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1.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논의

제4차 산업혁명은 그것이 가진 파급력의 속도, 범위와 깊이, 전체 시스템 모두에 걸쳐 새로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변화임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이를 미래사회에 대비할 크나큰 준비 기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은 어떠한가?

한국은 국가중심의 교육, 입시진학중심, 관료중심, 인권과 교권의 붕괴, 경쟁중심, 학교 폭력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고, 교육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점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이다.

미래사회에 도래 할 많은 사회적 문제 특히, 불평등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적 삶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출발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이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습격차와 돌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삶과 연계된 지식 탐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로 병합되어 배움의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의 아이들이 배움터가 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도록 하며, 아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과 상당히 조응되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사점과 아울러, 상당히 인권 친화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2. 교육청-지자체의 협력 모형 교육혁신지구사업

인천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 기본계획에 의하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지구 개념은 실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해야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온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결합된 광범위한 지역교육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틀이며, 그 안에서 해당 지역의 관과 민이 함께 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3. 공동체의 복원

학교 현장에서 ‘마을과 함께’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교육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함께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원래 교육과 돌봄은 그 지역의 공동과제였다. 그러나 근대 학교의 등장과 함께 교육은 국가 책무로 이관되었고 지역과도 분리되었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마을의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역과 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¹⁾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섬’ 처럼 존재했던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단순한 교육계의 작은 변화가 아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융합되어 전환의 큰 메가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167개의 지역에서 혁신지역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2015년 ‘교육혁신지구’의 명칭으로 미추홀구와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중구, 계양구, 부평구로 확대 지정했고, 2018년에는 연수구, 서구, 2019년에는 남동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비전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목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주민자치 실현, 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 관계 실현으로 설정했다. 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역 특화 사업 영역으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역사회를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들고, 지역의 시민적 역량을 선순환시키는 지역교육체계를 위한 실천이다. 미래교육을 예

측하는 다양한 전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지역이다. 미래지향적 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든 문제해결 역량을 추구하든, 그것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학교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맥락화 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 청소년들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학생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인천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내용

가.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통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학생이,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학부모가, 관리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학교의 운영주체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특정분야에서는 학교에 있는 교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숙련된 분들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곳곳이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전문기관, 시민단체, 문화 예술가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마을교육자원을 통하여 학교교육은 더욱 풍성해 질 것이고, 마을주민들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주체로 세워야 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원리이자 실천 전략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과 원칙 사업 및 추진위원회 조항이 포함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단위 거버넌스인 인천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부교육감, 부시장, 민간대표가 공동 의장이 되고, 시의원, 정책국장 등이 당연직 위원과 그리고 공개 추천을 받아 다양한 위촉진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장과 구청장이 공동 의장이 되어 구의원, 교직원, 시민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반기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동단위 거버넌스는 154개의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초중등 학교가 결합하는 형태를 지향하며 구축을 위해 동단위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팀을 공모하여 운영하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단위 거버넌스는 현재 학교마다 특색있게 운영 중인데 학교 인근 기관,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돌봄, 마을축제 공동 기획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며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별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핵심역량 개념에 대하여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²⁾, 인천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천의 특징을 반영하여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중점 사항으로 마을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삶의 배움터를 폭넓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³⁾

학생들이 삶 속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학교라는 공간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마을연계교육과정은 7개의 혁신지구 초등학교 339교를 대상으로,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25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예산 15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마을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학교단위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마을사람들과 마을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와 마을교육활동가와 함께하는 역량강화 연수, 포럼, 세미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지구별 마을교과서 제작 보급, 온라인 마을교육 콘텐츠와 워크북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 다양한 마을교육 자원목록을 체계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대하여 심화된 배움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⁴⁾

다. 마을학교 운영 지원

인천에서 키우고 인천에서 배우는 학생 친화적인 민주적 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인 인천마을학교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41교에서 2020년 71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인문, 예술, 진로, 생태 환경 등 다양하며, 협동조합, 연구소, 기관 등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서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교육과정 연계, 마을학교 운영 등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바로 공간이다, 학교 및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마을주민간의 배움·소통·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을교육플랫폼으로서의 공간 구축을 위하여 선학중 내 교육복합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마을카페, 마을부엌, 목공방, 동아리실, 공연장 등을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5.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동체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 가능 인구 급감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및 교육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 ‘학령기 집단의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소중한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산업사회 패러다임의 조직 문화가 이제는 창의와 유연성을 가치롭게 여기는 네트워크 생태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가 교육에 적용되면서 교과와 구분, 학급의 나눔, 학교간의 분절, 학교와 지역의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⁵⁾ 또한,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은 그 과제를 아이와 학교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은 교육서비스의 대상으로, 마을과 학교는 양자 대립적 관계로 해석되었다.

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이러한 분리와 분절을 넘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며, 기존의 교육에서 앞으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나들고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미래교육환경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용현동 화재 사건에서 보여지 듯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더욱 초래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에 처해 있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면과 관계중심의 마을교육이 코로나 19에서 어려워진 면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학교와 여러 기관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이 모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협의하며 풀어 나가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고, 마을강사와 협력하여 여름 방학 2주 동안 학교에서 마을학교를 열어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실천해가는 학교도 있다. 마을교육활동가와 교사,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대규모 연수나 모임을 소규모 집합으로 추진하며 전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에 일상이 숨 쉬는 지역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생태계 안에서는 유기적인 관계망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주도적 배움을 실천하고, 상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이제 학교와 교육청을 위시로 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다른 공적 영역을 포함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이 유기적 연대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지원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 날 수 있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사람이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라면 사람답게는 인간만이 누려야 할 특별한 권리이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동체, 주체, 연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추진되는 정책방향은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와 상상의 기반이 될 것이다.

-
- 1)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포럼
 - 2) 교육부(2016), 초·중 교육과정 총론
 - 3)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 초등학교 교육과정(2020-제68호)
 - 4)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마을교육 종합계획
 - 5) 김용원(2020), 미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전망,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6) 경기도교육원(2017)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